

2023 예산 · 정책 이슈

Budget · Policy Issue

이번달 주제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및 도입 배경
- 성과주의 예산제도 필요성 및 운영과정
- 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정책 동향

- 글로벌 신산업 초점 및 최근 동향 (기경위)
- 지역소멸 대안으로서 축제의 향후 발전 방향 (행문위)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 (복환위)
-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염 (농해위)
-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소위)
- 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의 과제 (교육위)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7월말 기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I. 이번달 주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및 도입 배경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필요성 및 운영과정
- ③ 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1.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및 도입 배경

1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투입보다 산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정부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결과중심적 제도

성과의 의미

- ❖ 능률성(양적측면) : 결과를 산출물에 기초하여 파악하는 방법으로 산출물의 규모를 투입물에 기초하여 표준화*
 - * 단위 비용/인력당 산출물 규모, 단위산출물당 소요자원 규모 등
- ❖ 효과성(질적측면) : 기관이 의도한 목적에 대한 실현 정도 또는 산출물이 목표로 제시된 상태를 실질적으로 성취한 정도
- ❖ 성과(performance) = 능률성(efficiency) + 효과성(effectiveness)

○ 지방성과 예산제도

- 지방성과 예산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성과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후 성과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예산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예산제도
- 성과계획과 예산을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별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계획 형태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과 사업예산의 정책 사업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함
- 집행후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절차를 거침

2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배경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및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함
 - 1990년 기획예산위원회는 당시 기능적인 측면에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로 전환필요
 -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함
- 2004년부터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대(大)재정개혁을 추진
 - 성과주의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구축
 -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적으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제도와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작성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

분석기준	분석의 초점
노무현정부 (2003~2008)	근거법령 및 지침: 국가재정법('06),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정과제 •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 재정사업자율 및 심층평가 조항 마련 • 4대 재정개혁 중 하나로 재정성과관리제도 체계 구축을 선언하여 성과예산제도 기틀 마련
이명박 정부 (2008~2013)	근거법령 및 지침: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정과제 지침 등 • 국가보조사업 준차평가제도 도입 • R&D,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통합평가지침 도입 • 사업군 단위의 심층평가방식 도입 •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간의 일치화 규정 마련(국가재정법 개정, 2010. 01)
박근혜정부 (2013~)	근거 법령 및 지침: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정과제 지침 등 •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 성과정보 현황판제도 도입 및 폐지 • 심층평가 사전예고제도,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의무제도, 예비조사제도 도입

자료: 금재덕, 임소영, 「한국행정연구」,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2016

2. 성과주의 예산제도 필요성 및 운영과정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1)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성과의 제고

-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인이 매우 낮음.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에 연계하여 성과향상의 유인을 제공함(IBM Center 2006)
- 정책 또는 예산의 집행과정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2)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 자원의 배분이 성과 및 수요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부문의 경우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체감됨(Jack Diamond 2005)
-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면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에 기초하여 적절한 공급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3) 목표의식에 따른 책임의식의 강화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업무의 재량권을 하부에 위임하지만 사후에 성과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책임성을 강조(Hansen 2003)
-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여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함

4)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이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문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지출에 투명성 제고
-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5)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 성과주의 예산은 자금이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성과가 바람직한 최종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려줌
- 이러한 성과정보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

6) 조직개편의 촉진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의 측면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Covaleski 2003)
- 이 제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단위당 비용에 대한 정보는 개선된 성과를 단위당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출을 확대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

7) 관리자에게 유용한 관리도구의 제공

- 성과정보는 조직의 모든 관리자에게 그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
- 정부부문의 관리자들은 성과측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는 관리 도구를 가질 수 있음**

자료: 조균제, 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 품목별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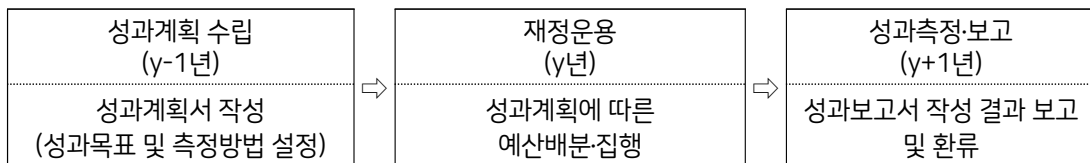
구 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의 관리단위	- 투입중심의 지품품목별 통제 - 예산절감 도모 장점	- 사업성과목표의 달성 -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
예산의 편성	- 조직부서의 책임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세부사업별로 품목과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예산총량 통제> -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하여 조직부서의 분야별 예산규모 한도내에서 사업에 기초한 예산편성 - 조직부서의 자율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집행 - 예산집행결과를 결산하여 확정마감 - 예산의 편성과 재원의 할당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용	- 정책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할당 - 예산집행의 부처/부서 자율권 확대 → 예산 집행의 사후평가 →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사업단위의 재정운영성과 제고
예산서 체계	- 숫자로 나열된 예산서 - 분야별 예산과목 금액의 나열표시	- 자치단체 사업내용 파악이 용이한 예산서 작성(사업별 편성) - 목표,계획,예산의 연계

자료: 임성일, (2013).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크게 성과계획수립→재정운용→성과측정 및 보고의 과정으로 구성

- **성과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과정을 포함하고, **재정운용 단계**에서는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조직의 유연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결산 단계에서는 성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는 단계**로 구성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① 성과계획 수립 단계

- 성과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는 1)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의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3) 정책사업목표 설정 4)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방법의 제시를 포함
- 이때 임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는 기관의 측면에서 분석.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은 사업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② 재정운용 단계

- 단계에서는 성과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의 배분 및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과 성과가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는 각 조직이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
- 이 과정에서는 과거의 전년대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증액하는 전년도 답습적 예산편성 형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직의 정책사업목표나 객관적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함**
- 목표 대비 성과달성 정도를 분석한 성과보고서 자료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함으로써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③ 성과측정 및 보고 단계

- 성과측정은 투입된 자원이 재화 및 서비스라는 산출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산출의 질이 어떠한지, 산출의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측정하는 과정**임
- 이러한 성과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며 조직별로 혹은 사업 활동 별로 **달성한 성과가 본래 설정하였던 목표에 대비하여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 등을 평가함**
- 이 때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측정 및 평가가 수행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 이렇게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며 환류의 과정**을 거치며 **내년도 성과계획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됨**

3. 타시도 의회 언론보도

1 [서울시의회] 서울런 사업 성과 '만족도'만으로 판단 어려워... 객관적 지표 마련해야

[메트로신문 / 김현정] _ 2022. 10. 24.

- 시의회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학력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제 성적 향상 정도 등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만족도 및 학습목표 도달·개선, 학력격차 해소에의 도움 인식 등 이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
- 시의회는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본 사업의 성과 지표는 ‘이용만족도’이며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85점 목표에 85점 실적으로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

2 [경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간 점검 자체평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_ 2023. 06. 27.

- 경북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중간 점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자체평가는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에 대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의 이행가능성, 측정산식의 정확성을 검토

- 또한 성과계획서는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함께 작성하므로 **성과지표**를 재인식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
- 경북교육청은 자체 점검 결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 사항은 2023년 하반기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에 반영

3 [전남도의회] 전남도의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주문

[CNB뉴스] _ 2022. 09. 20.

- 전남교육청은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5개)-성과목표(1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이를 78개의 성과지표로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11개 지표(14.1%), 달성 49개 지표(62.82%), 미달성 18개 지표(23.07%)로 나타남
- 박종원 의원은 “미달성 18개 목표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11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 “목표치를 쉽게 설정해 두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목표를 과소 설정하거나 측정의 편의성만 고려한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하길 바란다”고 당부
- 박종원 의원은 “결산 심사가 내년 예산편성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를 재차 점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임

4 [서대문구의회] “區 성과계획서 수치 부정확·관성적 목표 설정… 성과관리TF 운영을”

[시민일보] _ 2023. 07. 4.

-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이 최근 개최한 제291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과 결산 시 성과계획부터 분석에 있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주 의원은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를 진행했는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이 없다.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
- 두 번째는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한 사안으로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라고 함
- 셋째로는 가장 기초적인 수치와 문구의 부정확함에 대해 지적. 특히 “실제 성과계획서 등에서 부정확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정확한 성과지표와 수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그 수치나 측정 지표와 같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성과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함
- 주 의원은 “구청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성과관리를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함”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 성과관리 전략목표에 대한 점검

자치단체의 각 부서는 임무와 전략 목표를 조직 및 예산구조와 연계시켜야 하며, 특히 주어진 조직구조와 예산 하에서 전략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매우 중요함

- 전략목표는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전략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전략목표는 해당 자치단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가?

○ 성과 목표에 대한 점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전략목표를 구성하는 하위 목표로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함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달성 수단으로써 정책 또는 사업추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는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는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점검

성과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화된 척도, 성과지표는 성과의 달성 여부, 혹은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의미함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
- 투입·과정지표 아닌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는 신뢰할 수 있게 정의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는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Ⅱ. 정책 동향

- ① 글로벌 신산업 초점 및 최근 동향 (기경위)
- ② 지역소멸 대안으로서 축제의 향후 발전 방향 (행문위)
- ③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 (복환위)
- ④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염 (농해위)
- ⑤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건소위)
- ⑥ 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의 과제 (교육위)



1. 글로벌 신산업 초점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시장 클로즈업: 주요 신산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

- 신산업 대부분이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기회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반면, 경쟁도 치열할 전망
 - 현재 시점에서 주요 신산업 중 '인공지능'과 '수소산업'의 기회 요인(80점)이 가장 큰 반면, 시스템반도체의 기회 요인(5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 수소 단가의 핵심 결정 요인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국제협력의 본격화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생태계가 미흡한 가운데, 2025년경 파운드리 경쟁(TSMC, 인텔 등) 본격화 전망 등의 큰 위협 요인이 상존

■ 주요 신산업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

	기회 요인	위협 요인
	100 ← 50 → 0	0 ← 50 → 100
인공지능, 수소	80	20
스마트홈	75	25
이차전지, 로봇, 드론, 바이오시밀러	65	35
전기차, XR, 친환경 섬유	60	40
시스템반도체	55	45

- 신산업의 공통적인 기회 요인은 '시장 수요 확대'이며, 경쟁국의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 보안·안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위협 요인으로 작용
 - (기회 요인) 친환경 수요, 신흥국 시장 수요, 디지털 전환(DX) 수요, 가격 인하, 표준·규제 개선 등이 주요 신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위협 요인) 경쟁국의 생산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 시장주도 경쟁 심화, 안정성·보안 등이 우리나라 신산업 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위협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신산업의 최근 기술 개발 및 투자 전략

- (전기차) 중국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
- (자율주행) 닛산의 운전자 지원 기술 개발 투자 강화, 토요타의 글로벌 합작사 설립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상용화 노력이 활발
- (인공지능)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대한 OpenAI, 코히어, 어댑터, 앤스로픽 등 미국 스타트업의 투자가 활발
- 유망 성장동력인 미래차, 인공지능 분야 주도를 위한 미국·일본·중국의 투자 확대와 과감한 상용화 노력 추진 중

< 업종별 중점 기술 개발 및 투자 분야 >

업종별	글로벌 동향	국내 동향
전기차/ 자율주행	• 메르세데스-벤츠(독), 미국에서 차량에 생성형 AI '챗GPT'기반 기술을 시험적으로 탑재하기 시작 (2023. 8) • 토요타(일), 2026년 발매하는 전기차(EV)에 새로운 생산기술 '기가 캐스팅'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 (2023. 7) • 덴소(일), 대상물을 감지하는 밀리미터파(mmwave) 레이더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2028~2029년에 걸쳐 실용화할 계획을 발표(2023. 7)	• 플러그링크, 비공용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단독주택 충전 서비스 '홈차장' 론칭 • 현대차, 기아는 BMW, 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와 미국에서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로봇/ 드론	• 가시마(Kajima Corporation, 일), 건설회사 가시마는 인공지능 기업 AI 인사이드(inside)와 공동으로 멀티모달 AI통합 플랫폼 'AnyData'를 활용하여 AI와 드론을 활용한 '자재관리 시스템'을 개발(2023. 7) • 인텔 캐피탈 및 파크웨이 벤처 캐피탈, 브렛 애드콕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인 Figure에 900만 달러 투자 결정	• LG유플러스, 물류로봇 분야 사업확장을 위해 유진로봇과 업무 협약 체결
바이오/ 헬스	• 아칼리스(일), mRNA 의약품 제조를 위한 신규 설비 중 일부 준공(2023. 7) • 미야코캐피탈(일), 200억 엔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여 바이오·생명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5억~10억 엔 투자 • 화이자,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과 70억 달러 규모의 옵션딜을 체결하며 신규 혁신 의약품 파이프라인 개발 투자	• 셀트리온 그룹, 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로 글로벌 빅파마 진입 추진 •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미)의 주식 650만 주 취득 → 노바백스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도 확장 체결

업종별	글로벌 동향	국내 동향
인공지능/ 5G	• 엔비디아(미),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신규 반도체 세트 'GH200'을 개발(2023. 8) • 마이크로소프트(미), 기업용으로 특화된 대화형 AI 제공 시작(2023. 7) • NTT 도코모(일),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행동 이력을 분석하고 개인의 면역력 변화를 추정하는 인공지능 '면역력 추정 AI'를 개발(2023. 7) • 테슬라(미), AI를 개발하는 신회사 '엑스에이아이(xAI)' 설립을 정식으로 발표(2023. 7) • JERA(일), 일본 최대 화력발전소 JERA는 AI를 활용해 발전소 운영을 근본적으로 검토 계획(2023. 7)	• SKT, 페르소나AI에 투자를 통해 자사의 AI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2023. 8) • 카카오, 카카오브레인에 800억 원을 출자하며 AI 투자 강화 → 하반기 인공지능 서비스 '코GPT 2.0' 출시를 대비한 움직임
지능형 반도체	• TSMC, 보쉬, 인피니언, NXP 합자로 신규 파운드리 합자회사 ESMC 설립 계획 발표 • 퀄컴과 유럽 반도체 5개사, 합작 기업 설립 예정 • AI 칩 스타트업 그로크(Grok),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차세대 AI칩 생산	• 삼성전자, 현대차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3나노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Exynos Auto) V920'를 공급할 계획 발표(2023. 6) • 현대차그룹, 텐스토렌트에 5,000만달러 투자 발표(2023. 8)
수소/ 이차전지	• 토요타 자동차,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 2027년 출시발표 • Accelera(Cummins Inc.의 친환경 사업 부문)는 미국 내 최초의 수전해 생산시설을 미네소타주에 갖추고 제품 생산을 시작 • 연료전지 추진선 프로젝트인 HyBarge를 위해 HGK Shipping, Hydrogious LOHC Maritain, Hydrogious LOHC Tech.등의 업체들이 MOU를 체결(2023. 5) • 토요타, 세계 3위 건설기업인 XCMG(中) 및 중건 자동차 제조사 해마기차(中, 海马汽车)와 전략 제휴 발표 • 도호쿠 대학(일),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새로운 촉매 개발(2023. 8)	•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에 대한 집중 투자 발표(2023. 7) • 원자력연구원, 기존의 절반 수준의 백금만을 사용한 연료전지 촉매 제조 기술 개발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전기차·자율차) 급속 충전 규격과 관련한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의 합종연횡이 진행되며 테슬라의 NACS(북미충전표준) 규격이 점차 확대
- (지능형 로봇) 인텔 캐피탈, 파크웨이 벤처 캐피털, 브렛 애드콧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
- (드론) 안전감시(원전 안전 점검, 안전 구조 등)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 드론 활용 확대
- (스마트홈/AR·VR) 애플의 XR사업 진출 본격화에 따라 구글,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들의 대응 본격화
- (바이오의약·헬스)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등 대형 제약사의 경쟁 가열
- (지능형 반도체) 고집적화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후공정 기법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AI 반도체 제조사들은 기반 알고리즘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 방향 선회
- (스마트 섬유) EU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섬유제품 디자인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
- (인공지능) 생성형 AI 부상에 따라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기업들의 생성형 AI 진입이 활발
- (이차전지) 토요타 자동차, 프롤로지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 가속화
- (수소) SK E&S의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에어프로덕츠의 액화수소 충전소 건설 등 국내외에서 액화수소 생산시설 증가 추세가 지속

출처: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2023. 8월) 재작성

2. 지역소멸 대안으로서 축제의 향후 발전 방향

■ 축제의 시대전환과 인구정책

- 팬데믹 이후 축제는 초연결 사회 도래로 기존 축제의 시공간이 초월되면서 기존 정주민구와 교류인구를 초월해 일상에서 관계 인구 구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글로벌 도약 초월성 축제¹⁾를 탄생시킴

〈표 1〉 축제의 시대 전환과 지역 인구정책

구분	전통축제(1.0)	현대축제(2.0)	초월성축제(3.0)
사회 구조	신분 사회	여가 사회	초연결 사회
축제 미션 (인구정책)	공동체 유지 (정주민구)	경제효과 (교류인구)	글로벌 (정주민구, 교류인구, 관계 인구)
축제 엑스터시	제의 엑스터시	놀이 엑스터시	공유 엑스터시
	축제 본질: 반구조(anti-structure)로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		
축제 가치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역의 경제적 가치	인류의 사회적 가치
축제 대상	지역주민 중심 축제	관광객 중심 축제	인류 중심 축제
축제 범위	주민 이동이 중심	국민 이동이 중심	세계적 연대가 중심

자료: 신현식·김상원(2021)의 FGI를 통한 초월성 축제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 시대전환의 변곡점에서 현대축제 개념을 넘어선 확장과 초월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
-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아젠다는 전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로컬문화를 축제로 경험하게 하는 축제 한류와 그 공유에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교류인구 증대와 관계인구 확충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궁극적으로는 정주민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임

1) 초월성 축제는 2021년 출간된 신현식의 저서이다. 팬데믹을 통해 축제 초월 현상을 바라보면서 축제의 시대전환을 전통-현대-초월로 정리했으며 미래축제의 방향성을 온오프라인 융합축제인 초월성축제로 개념해 T-SECC모델로 제시하였다.

■ 축제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소멸 대안

1) 지역주민이 아닌 공유 엑스터시를 창조하는 축제 시민

- 지역의 문제를 주민만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지역소멸을 가속화 한다. 지역과 외지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축제시민 개념이 필요
- 축제를 지역과 주민이 소유하려는 패러다임이 아닌 축제를 전세계와 공유하려는 패러다임으로 지역과의 관계형성과 애착형성이 핵심
- 일본 오타루 눈빛 거리 축제 한국인 자원봉사단(OKOVO) 사례

[그림 1] 일본 오타루 눈빛 거리 축제 한국인 자원봉사단(OKOVO)



자료: 오키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mOKOVO>).

2) 축제 산업 생태계 구축 공간으로 복합축제장 조성

- 초월성 축제는 지역에서 일상 시에도 축제를 생산 및 소비하는 개념이며 온·오프라인 전용축제장 구축과 장소마케팅 기반의 융합축제 플랫폼 전략으로 축제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전용축제장의 성지화와 일상화를 강화시키는 생태계 구축
- 축제가 일상화라는 시공간을 창조하고 축제시민 양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한 축제생산거점운영과 선순환은 지속가능한 축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축제산업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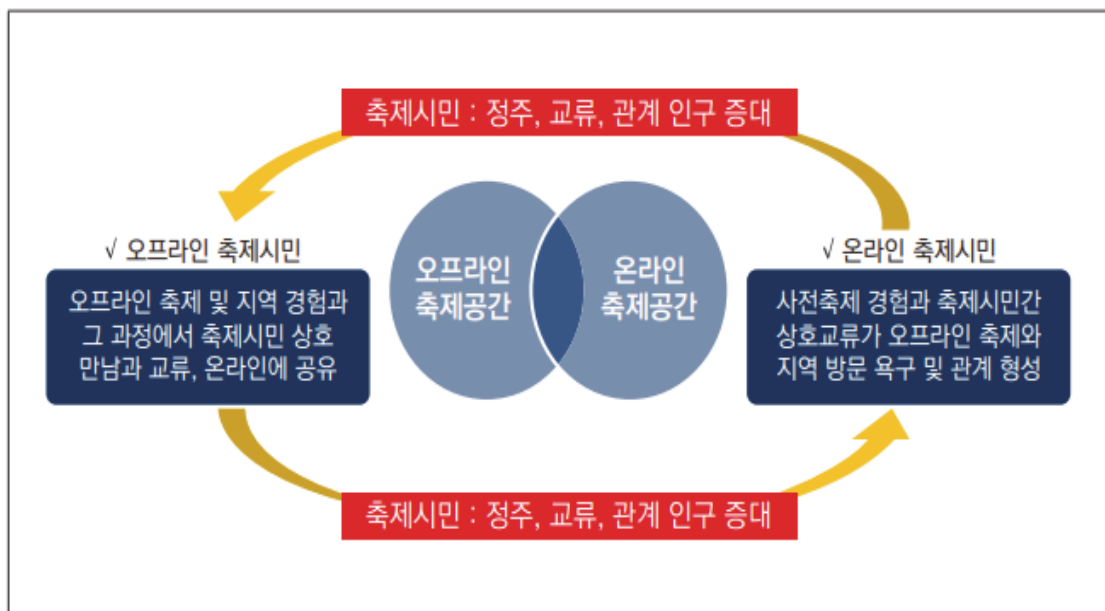
이면서 동시에 인구정책의 일환이 된다.

- 시공간을 초월해 상시적 콘텐츠 생산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 구축과 오프라인에 축제 생산 거점을 상설화하는 제3의 공간 창조 정책이 필요
- 일본 도쿠시마시 아와오도리축제는 아와오도리화관을 통하여 축제 일상화를 실현함. 창업공간, 카페, 식당, 여행사, 체험공간, 아카이브관, 연습실 마켓 등이 공존

3) 융합축제 선순환과 축제시민 양성

- 온라인 공간을 통해 축제시민을 모집하고 사전경험과 정주민구와의 사전교류를 빈번하게 하여 융합축제 선순환과 축제시민 양성 정책 필요

[그림 3] 융합 축제 선순환과 축제 시민 양성



자료: 저자 작성.

4) 개인과 사회적 행복을 실천하는 축제 선진화와 팬덤문화 구축

- 초월성 축제는 로컬 정신을 새롭게 실천하는 문화 운동과 이것에 동참하는 축제 시민의 행복 치유 패러다임을 강조
- 일상에서 축제시민 개인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욕구를 축제 참여로 집단화 하고 그

공동체 속 공유 엑스터시가 개인과 사회의 욕구를 해소 가능하도록 함

- 지역이 인류를 지키는 축제를 표방할 때 전세계인들은 그 축제가 잘 되길 응원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욕구까지 유발
- 축제시민들은 초월성 축제로 구축되는 핵심 관계인구이며 지속적 교류는 궁극적으로 정주민구로 전환되는 기회 마련

■ 축제 가치 혁신과 정책 전환 방향

- 엔데믹 시대의 대한민국은 전세계 축제시장을 선도하고 축제의 한류를 일으킬 시기를 맞이함. 지역관광의 선봉에 있는 축제를 지역 글로컬 실현의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지역소멸 대안 정책 중 하나로 축제를 인식
- 초연결 사회에서 IT강국인 대한민국이 K-Festival을 브랜드화하여 초월성축제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지역소멸을 막고 전세계 축제 및 관광시장을 선도해야 함.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023-여름호 재작성

3.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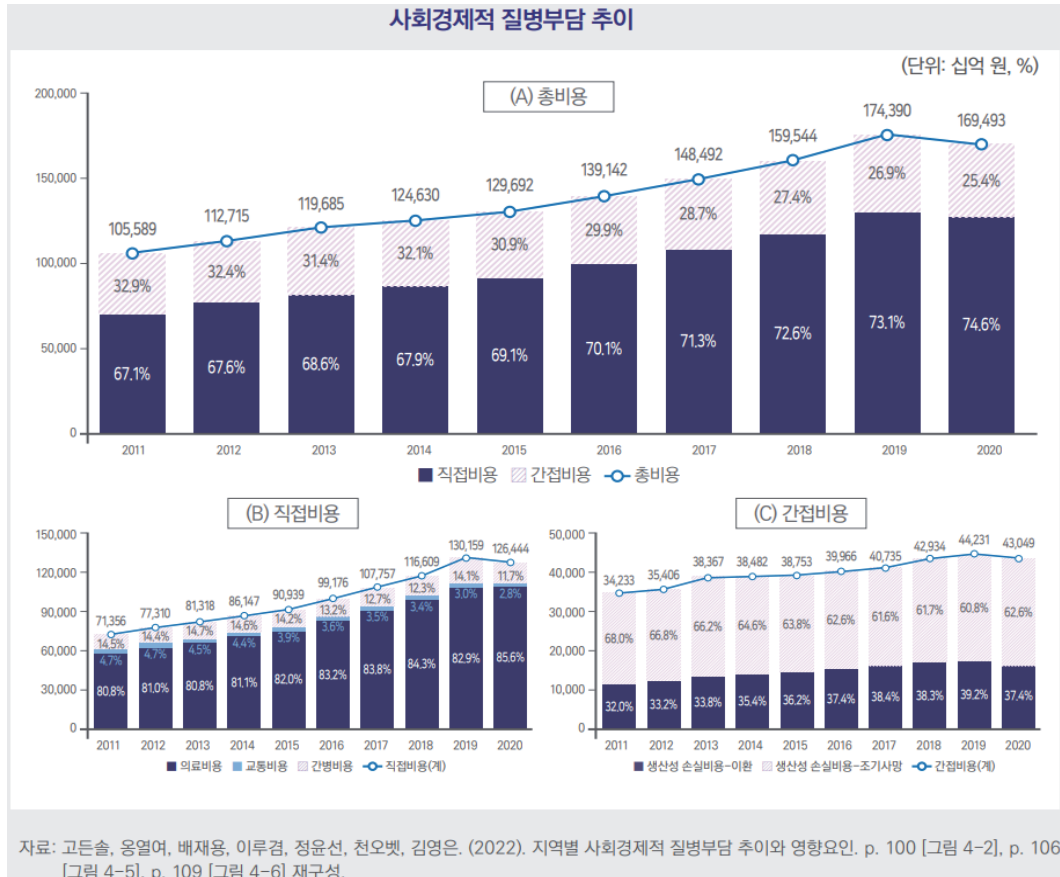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산출의 의의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즉 질병비용(cost-of-illness, COI)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지표로, 건강 가치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질병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용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의료비용과, 금전적 가치로서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과 생산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시간비용,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 등 의료비 외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개념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계층 또는 관리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근거가 됨. 또한 지역 단위 건강 결과를 측정하고, 지역별 격차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음

■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

- 한국의 2020년 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4,930억 원이었음. 이 중 74.6%는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 25.4%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임
 - 총비용은 2011년 대비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각각 6.6%, 2.6% 증가하여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罹患)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질병부담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남(2020년 남성 53.2%, 여성 46.8%). 남성은 직접비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낮으나 간접비 비율이 높음. 그러나 2011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6.5%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
 - 연령대에 따라서는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고, 50대

미만에서 감소하였음 (총비용 기준은 50대 > 60대 > 40대 순이고, 간접비는 50대 > 40대 > 60대 순)



○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2011년 평균 232만 1,573원에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음

- 지역별 1인당 비용은 간접비용(2.4%)보다 직접비용(4.1%)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컸으며, 세부 비용 항목에 따라서는 직접비용 중 의료비용(4.8%), 간접비용 중 이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2%) 순으로 증가율이 컸음
- 시·군·구별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지역 변이(variation)는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시·군·구 간 변이가 증가하였음. 이는 최대 지역 시·군·구의 간접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함. 세부 비용 항목에서는 직접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변이가 컸으며, 특히 간병비용의 경우 그 변이가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정책과제 제언

-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이환으로 인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인구집단 중에서도 사회·경제 활동의 주 성·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전 연령에 걸쳐 사망비용의 규모가 크고 건강 행태 관련 요인의 전반에서 관리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므로, 질환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 변이는 이환과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따른 간접비용에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변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총비용에서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가운데 간접비용의 지역 변이가 커지고, 특히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비용보다 그 변이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 간 차이와 평균임금, 고용률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의 지역 간 차이 또한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의료 접근성 제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지역 변이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질병에 포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집단 간 차이가 파악된다면,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크기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 특히 건강 결과에서 관찰되는 지역 간 격차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 위험 요인뿐 아니라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 사회적 지지 체계 및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023. 7.) 재작성

4.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 폭염

■ 기후위기와 폭염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대화로 진입

- 2023년 7월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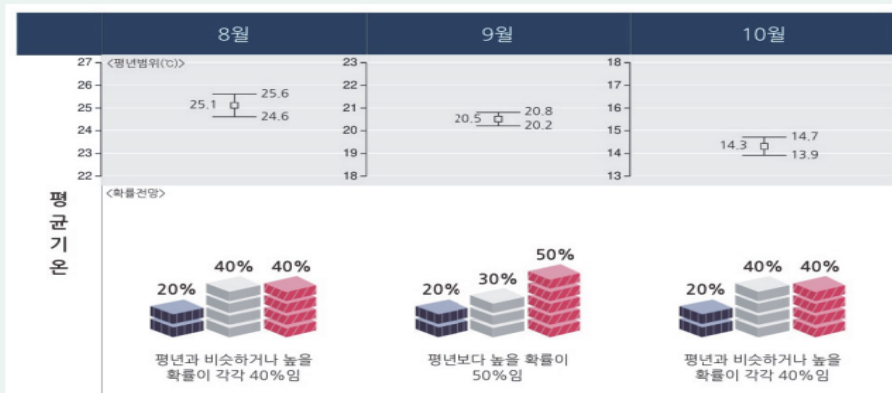
○ 한국의 폭염일수 증가 및 평균 최고기온도 상승 추세

- 평균 폭염일수의 연(年) 합계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았고,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증가 추세를 보임. 전국 평균 최고기온도 1973년 17.7℃에서 2022년 18.6℃로 상승 추세

○ 기상청은 올해 8월,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많을 확률을 40%로 발표

- 기상청은 2023년 7월 24일에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8월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발표, 이상고온 발생 빈도가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올해 8월과 10월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로, 9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됨.

〈그림 3〉 평균기온 3개월 전망(2023년 8월~10월)



자료: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w/weather/long-term/month3.do#>), 검색일: 2023. 7. 27.

■ 농업분야 폭염 피해 및 대응책

○ 농업분야 폭염 인명 피해의 빈도는 낮으나 사망확률이 높고, 농작물 피해는 증가 추세

- (인적 피해) 농업인안전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 폭염으로 인한 보상건수는 연간 20~150건에 그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연 사망자 수는 3~17명임. 따라서 폭염 사고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확률이 매우 높은 저빈도-고심도의 구조를 보여 인적 폭염 피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1〉 농업인안전보험 폭염 관련 보상 인원 및 사망자 수

연도	폭염 피해 보상 인원(명)	폭염 피해 사망자 수(명)	사고 발생 시 사망확률
2015	23	6	26.1%
2016	89	17	19.1%
2017	64	12	18.8%
2018	151	8	5.3%
2019	80	10	12.5%
2020	40	17	42.5%
2021	39	5	12.8%
2022	54	3	5.6%

주 1) 각 연도 6, 7, 8, 9월 내 결과질병코드명 중 일사병, 열사병, 자연열, 열탈진으로 추출함.

2) 2021, 2022년 폭염 피해 사망자 수는 지급 종결 기간이 길어 현재 지급 데이터에 미반영되어 과소 산출 가능성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농작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 최근 지급건수와 피해면적은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지급건수와 피해면적은 2018년대비 각각18.9배, 3.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1.2배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폭염에 대한 사전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노지작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대응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표 2〉 농작물재해보험 폭염 관련 보상

연도	지급건수(건)	피해면적(ha)	총 지급보험금(백만 원)
2015	1,871	-	559
2016	1,836	-	939
2017	6,415	-	3,587
2018	13,169	65,193	6,541
2019	11,987	28,456	2,237
2020	42,630	92,508	10,543
2021	249,067	230,719	73,447

주: 각 연도 6, 7, 8, 9월 내 사고원인 중 폭염으로 추출함.

자료: 저자 작성.

- (가축 피해) 중소가축인 돼지와 닭, 오리가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높아 2018년, 2019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으나 2020년대 이후 피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축산 부문에서 2018년 폭염 피해 이후 축사 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사전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됨.

○ 농업분야 폭염 대응책

〈표 4〉 농업분야 폭염 대응책

구분	농업인	농축산물
사전 대응	•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조치 - 알림서비스(온열질환 예방요령) - 현장 지원(취약계층 현장 방문) - 예찰 활동(무더위 쉼터, 드론 활용 작업현장 예찰)	•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 산지 점검(모니터링) - 안정생산 지원(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 수급 안정(수매비축 및 계약 출하 물량 확보, 예비묘 준비) • 가축 폐사 등 축산 폭염 피해 예방 • 축사 점검(사육밀도, 환풍기, 냉방시설 점검) • 시설 개선(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 축사 관리요령 및 폭염 정보 제공
사후 대응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보험금 지급 • 재해복구비(임식비, 대파대, 농약대) 지급

자료: 저자 작성.

■ 시사점

○ 기후열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 구체화·일상화 필요

- (인적피해 줄이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폭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의 생활화가 중요함. 영농교육 시 사전교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며, 폭염 시기에는 모니터링과 상시적인 경고메시지를 통해 폭염 회피 생활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함.
- (물적피해 줄이기) 연동하우스에는 차광막과 차열망, 차광도포제를 활용하고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여 고온장애로 인한 피해 예방, 노지의 경우 중장기 적으로 고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분야 폭염 피해 대비와 대응책을 다시 점검하고 치밀한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

- (농업활동, 시설 및 시스템 점검) 작목별, 농업활동 형태별(실내외), 지역별, 시설별 폭염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폭염 취약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매뉴얼 마련과 시설별 저탄소 폭염 저감 기술 적용 등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제도 정비) 긴급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 강화 등을 통해 위험 관리 안전망 확충. 폭염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 보장 품목의 확대, 효율 및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자발적인 보험 가입이 확대되도록 유도
- (농산물 수급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작황 및 출하량 변화 등과 더불어 폭우 역시 원인 중 하나이고, 이후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기후 영향이나 작황 부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농가 경영위험이 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함. 수급 대응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폭염과 가뭄 등에 강한 품종개발과 재배 방법 등의 연구에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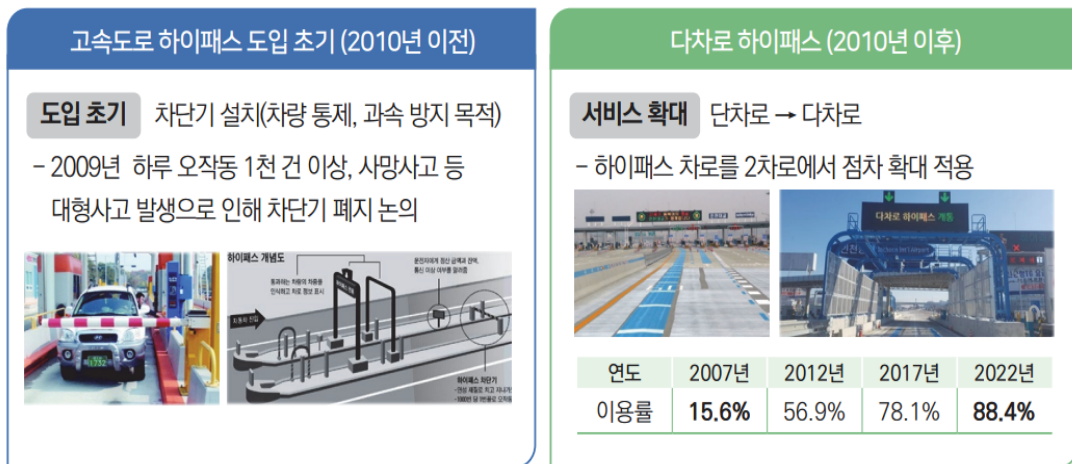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농정이슈플러스(임영아 연구위원) 재작성

5.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개요

-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은 대중교통 승하차 과정에서 교통카드의 물리적인 태그 없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대중교통 결제 구역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자동으로 지불하는 시스템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에서는 ‘비접촉 교통결제시스템’을 ‘언택트 요금징수 시스템 기술’로 명명하고, “친환경·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였음
 - 도로 분야에서는 이미 2000년 6월 고속도로에 우선 적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활용되어 2022년 기준 고속도로 이용자의 88.4%가 하이패스를 이용중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3

■ 해외 동향

- (독일 ALLFA Ticket) 특수 전자카드 또는 휴대폰의 무선통신을 활용한비접촉 교통결제 서비스로서 버스에 시범 운영 중

- (독일 LOGPAY) 하나의 카드, 앱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구현되는 앱 서비스
- (싱가포르 Hands-Free Transit Ticketing) 핸드프리 게이트가 설치된 지하철 역 장애인 출입구에 시범 운영하며, 모바일 기기와 RFID 카드 방식을 병행
- (호주 Rfid Tags for Transit Ticketing) 버스 탑승 시에 리더기가 카드 또는 스마트기기를 감지하고, 해당 기기와 연결된 결제정보에 의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
- (스위스 FAIRTIQ) 기차, 버스, 트램, 보트 등 탑승 전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도착 시 '중지' 버튼을 누르면 요금 결제

■ 국내 도입 현황

- (로카모빌리티) 경기도 공공버스('22. 2), 대구 1호선(상인역, '22. 5)에서 '태그리스 서비스'로 운영 중
- (티머니) 서울 우이-신설선(북한산우이역, '22. 7), 인천 2호선(주안역, '22. 7)에서 '스마트 게이트 서비스'로 시범사업을 수행 중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종시 S-BRT 국가 R&D 사업('22. 9)에서 시민체험단을 대상으로 '태그리스 서비스'를 진행했고, 기관 고유사업으로 스마트게이트프리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23년 부산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

국내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도입 현황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3

■ 도입 시 미래상

- 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연계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은 이용자가 물리적 태그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
- 모빌리티 사업자의 다양화, 다변화를 통한 적자 없는 공공 교통운영기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 중앙/지방 정부는 각종 데이터 수집,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디지털 정부, 국민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비접촉 교통결제시스템 미래상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3

■ 추진 과제

- ① 결제시스템의 인식 정밀도 향상 ② 부정승차 방지 대책 ③ 시스템 보안 강화 ④ 전국 호환이 가능한 체계 마련

■ 결론

-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은 미래 모빌리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비접촉 교통 결제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핀셋 방안이 필요함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 BRIEF (2023. 3.) 재작성

6. 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의 과제

■ 배경

- 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 명 이상의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함
 - 2022년 다문화 학생이 16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학생 중 3% 정도를 차지(교육부, 2023)
 - 저출산과 이주 배경 학생의 비율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많은 학교가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
- 2006년 이후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부모 지원, 교사 교육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조치가 교육 전반에 걸쳐 실행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은 범교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시
- 다문화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현상은 다양성이 증대되는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두 모습의 다문화교육: 교육복지적 다문화교육, 이벤트적 다문화교육

- A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 A초등학교는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 이상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은 학교임
 -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 중도입국학생,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학생, 불법체류자 가정의 학생,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임
 - 학교에서는 이들의 학적 등록부터 언어교육, 한국어가 어려운 부모를 위한 안내장 번역 등 복지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교육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 B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 B학교는 혁신학교이며, 최근 주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이 지역은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많지 않음
- B학교의 다문화교육 담당자는 다른 업무에 더해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조사와 교육청 공문을 다른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학생들은 1년에 두 시간 정도의 다문화인식개선 수업으로 다른 나라의 옷 입어보기, 음식 먹어보기와 같은 체험 수업을 받게 되며, 상호문화교육주간이나 교육과정 내 다문화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일회성의 다문화감수성 교육이 진행됨

○ 두 학교의 다문화교육의 차이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밀집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현황임

- 다문화 배경 학생이 많은 A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이들을 학습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복지적 측면의 다문화교육으로 운영됨
- 특히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이 다문화교육과 중첩되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B초등학교는 주로 비 다문화 학생들로 이루어진 전체 학교 구성원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두고 이벤트성 다문화교육이 진행됨
-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은 보통 다문화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다른 나라의 옷 입어보기, 다른 나라 음식 만들기 등이나 담임교사가 주가 되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됨

○ 다문화교육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넘어가는 이유

- 교사들이 다문화교육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있기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지원이 부족함

○ 다문화교육 대상자를 특정하여 구분하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되며, '다문화'의 이름으로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하는 인종주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한편으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만 인식됨에 따라,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나 우대가 기존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지가 제기되기도 함

■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으로의 변화

-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편향적 태도가 존재함
 -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이 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는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음
 - 즉,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다문화 배경 학생의 언어 학습을 통해 그들을 우리 문화에 통합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사회에 차별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백인문화의 특권(Whiteness)이 미국의 다문화교육이 마주한 장애물이었다면, ‘한국인다움’(Koreaness)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마주한 문제로 제시됨
 -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타자와 공존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혁적 다문화 시민성 교육(transformative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으로 변화하여야 함
- 다문화교육은 학생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변혁적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
 -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인종주의나 차별을 넘어 모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세계시민적 접근이 필요함
 - 국가라는 틀을 넘어 세계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계와 나의 연결성을 이해함으로 현재의 단편적인 인종주의적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임
 -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아닌, 세계시민적 연대를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 이를 통해 서로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023. 8월) 재작성

Ⅲ.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7월말 기준)

○ (자체수입) '23년 7월말 기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 1조 7,405억원

- 목표액(3조 361억원) 대비 57.3% 징수율 (※ 6월 징수율 48.2%)

- 전년동기 징수액(1조 7,472억원) 대비 △67억원 감소(△0.4%)

○ (지방세) '23년 7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 1조 6,542억원

- 취득세는 6,120억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0.8% 징수율(※ 6월 징수율 52.4%)

- 취득세 전년동기 징수액(6,752억원) 대비 △632억원 감소

○ (세외수입) '23년 7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 863억원, 전년동기 대비 128억원 증가

('23.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 (A)	징수액 (B)	목표액 징 수 율 (B/A)	전년동기 징 수 액(C)	전년대비 증감	
						금액 (B-C)	비율 (B/C)
합 계		30,361	17,405	57.3	17,472	△67	△0.4
지 방 세	소 계	29,200	16,542	56.6	16,737	△195	△1.2
	취 득 세	10,074	6,120	60.8	6,752	△632	△9.4
	등록면허세	835	473	56.7	505	△32	△6.3
	레 저 세	200	128	64.0	112	16	14.2
	지방소비세	14,015	7,410	52.9	7,119	291	4.1
	지역자원시설세	1,157	838	72.4	650	188	28.9
	지방교육세	2,870	1,541	53.7	1,567	△26	△1.7
	지난년도수입	49	32	65.3	32	-	-
세 외 수 입	소 계	1,161	863	74.3	735	128	17.4
	경 상 적 수 입	270	217	80.4	190	27	14.2
	재산임대수입	21	15	71.4	19	△4	△21.1
	사용·수수료	69	35	50.7	37	△2	△5.4
	사 업 수 입	71	9	12.7	9	0	0.0
	징수교부금수입	68	81	119.1	87	△6	△6.9
	이자수입	41	77	187.8	38	39	100
	임 시 적 수 입	884	637	72.1	539	98	18.2
	재산매각수입	23	26	113.0	109	△83	△76.1
	자치단체간 부담금	199	135	67.8	145	△10	△6.9
	보조금반환수입등	662	476	71.9	285	191	6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	9	128.6	6	3	50.0
	과 징 금 등	7	9	128.6	6	3	50.0

-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본 정보지는 예산정책 관련 동향을 수집·가공한 자료이므로,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 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